



◇ '개발'이라는 명분 아래 국토의 허파인 국립공원이 병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작년 겨울 개척된 우주 유니버시아드대회장을 개설기 위해 국립공원 덕유산이 개발 되는 장면. (사진제공 - 환경운동연합)



◇ 국립공원은 국민의 휴양지로 철저히 보존관리되어야 할 보물이다. 사진은 소백산국립공원. (사진제공 - 국립공원관리공단)

산 좋고 물 맑던 국립공원 '관리 엉망'

곳곳에 오물 · 악취...개발분쟁...말로만 '정신휴양지'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우리나라 최고의 자연을 독점하여 국민들에게 나쁜 상품을 팔아먹는 불쾌한 독점기업인 것 같다.”

최근 어느 대학의 교수가 한 신문의 칼럼에 국립공원인 지리산을 다녀 온 소감을 기고한 내용의 일부이다. 그 교수는 지리산의 산장과 야영장의 시설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오물 정화 시설이나 수거 기능이 마비된 듯한 관리체계에 할 말을 잊었다며 이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근 지리산을 중추한 가림산악회 회장 박득규씨도 “얼마전에 새로 지은 배소형 대피소의 경우는 정화 소각 시설이나 취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악취가 코를 찌른다”고 전했다. 박회장은 또 “같은 지리산 공원이지만 정터목 산장의 경우는 유독하는 등산객의 신분증을 받아 뒀다가 돌아갈때 쓰레기를 회수해 와야 신분증을 돌려주는 방법을 택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며 산의 쓰레기 문제는 등산객의 의지와 관리자의 제도적 처방에 따라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산이 좋아 산에 간 사람들이 왜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일까. 산악관리자들은 하나같이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과 입장료를 내고 왔으니 버리고 가면 누군가 치우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라고 분석한다. 국립공원 지역은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마지막 보루다. 환경과 자연생태적 측면이 아니라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국립공원의 청정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생명줄이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경관 및 문화 유적지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에 기여토록한다는 목적으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 현재 국립공원은 20곳이 지정되어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도표1 참조> 그러나 국립공원의 지정 30년을 맞은 올해까지도 지정 목적과는 다른 길을 걸어와 국토의 허파를 병들게 했다는 비난을 수없이 들어왔다. 공원관리의 횡침은 고사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공원지역의 자연훼손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작년 3월 감사원이 국립공원에 대한 감사결과 탐방객들을 위한 공원내 집단편의 시설인 집단시설지구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거나 무분별하게 개발되어 공원환경을 해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립공원의 수질오염방지 업무와 그에 대한 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

도 했다. 전국 국립공원의 계곡 및 해안변에 산재한 2천 8백57곳의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에서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음식찌꺼기와 오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립공원내의 불법건축물도 하루속히 정비되어야 할 대상으로 꼽힌다. 작년 국립공원 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불법건축물 단속을 벌인결과 5개 국립공원에서 9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속리산 국립공원의 경우 88건에 이르는 중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방자치체 실시 이후 국립공원 지역의 개발 욕심은 더욱 가속화했다. 지자체들은 국회에서까지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국립공원의 개발사업에 집착을 보이고 있다. '개발이 곧 돈'이라는 지자체의 현실적인 타산이 국립공원의 개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 상당수의 개발관련 사업이 추

관리공단 30년째 무능한 독점 정화시설 제대로 갖춘곳 없는데 공원입장료 수입 어디다 쓰나
'입장료 폐지' '국세로 운영' 여론 국민환경의식 전환도 필수 과제

진되거나 환경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적인 대응으로 맞서고 있다. 95년 12월 30일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며 공원지역내의 개발사업이 강력히 규제되고는 있지만 그 이전에 허가를 얻은 개발업체들은 어떻게 해서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최근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중요 문화재가 포함된 사할 인근에서 개발이 추진되어 환경분쟁을 야기시킨 사례도 10여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표2 참조>

병들어 가는 국립공원을 회생시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환경단체들은 이같은 질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국

<도표1>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 현황

항목	현황	비 고
국립공원 총지점수	20개소	첫지점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 총면적	6천4백4173ha	면적 3,825km ² 이상 2,648km ² 전 국토의 3.9%
국립공원 연간이용객	3천만명	
관리공단 설립	1987.7.1.	자연공원법 제149조 2에 근거
관리공단 임직원	722명	본부 84명, 지방 638명
관리공단 연간예산	400여	인정료 230여 정부 출연금 70여 시설이용료100여
관리공단 관리사무실	26개	관리사무소 23, 시설사무소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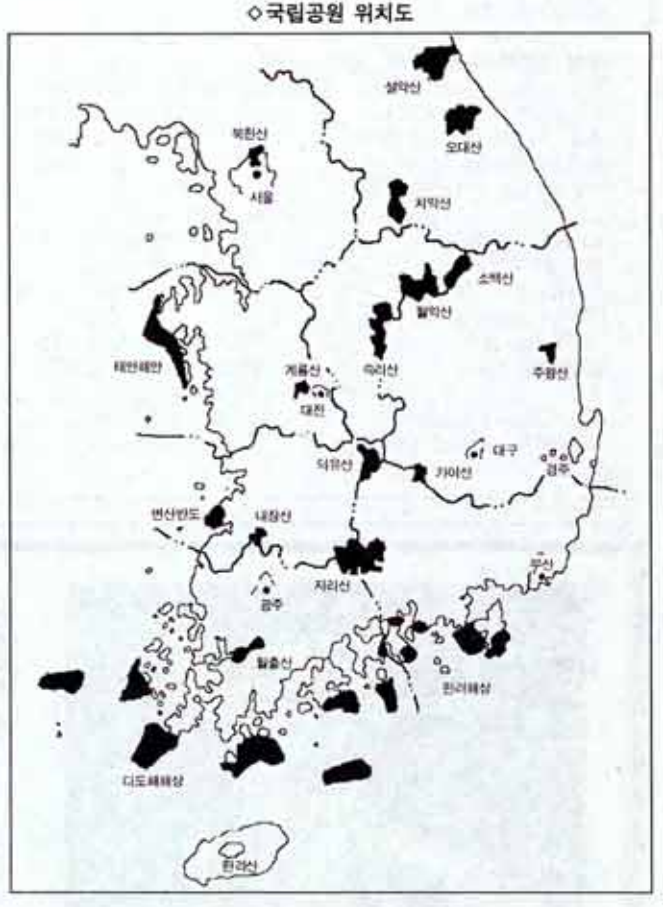
민의 자연보호 인식이 고양되어야 한다는 점을 꼽는다. 다음으로는 공원의 관리 주체가 보다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답을 내놓는다.

국립공원 관리의 문제점은 지난 30년간 관리주체가 일관되지 못함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967년 첫지점 이후 해당지역 행정관청이 관리를 맡아 오다가 87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공원 관리의 주체는 건설부로 넘어 갔다. 91년에는 다시 관리공단이 내무부 산하로 들어 가며 국립공원의 관리 업무는 내무부 소관이 되었다.

현재는 국립공원의 관리 주체가 내무부에서 환경부로 이양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대두되고 있다. 또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공단이 내무부 산하에 존립하기 보다는 문화재관리국처럼 하나의 외국(外屬)으로 자리잡던가 공원으로 지위와 위상을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존과 개발이라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현재의 구조로는 두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결론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체 운영예산의 확보를 위해 징수하는 공원입장료와 주차장 등 시설이용료 정부출연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관리공단의 예산 자체가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보고 있다. 사실 공단은 '지나치게 수입에 매달리고 본연의 임무인 공원관리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공원입장료를 과감히 폐지하거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들을 국가세입으로 하여 공단의 운영에 따른 예산을 정부가 일괄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원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탐방객들의 무분별한 취사행위와 오물투기를 단속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단속요원의 확충과 그들에게 사법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단측의 주장이다.

30년 상상이 무색하게 '불쾌한 독점기업'이라는 혹평을 면치 못하는 국립공원의 현실은 제도적 모순과 국민 의식의 후진성이 빚어낸 결과일 수 밖에 없다. 국립공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지와 관리공단의 전문화 된 관리체계 운용, 그리고 국민의 의식전환이라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한다.



<도표2> 국립공원 개발에 따른 사할환경분쟁현황

해당공원	개발내용	관련사실	추진상황
가야산	해인골프장	해인사	소송계류중
가야산	동아골프장	해인사	경남 합천군 검토중
속리산	분장대 용화지구 온천개발	법주사	소송계류중
덕유산	유니버시아드대회장 건설	백련사 안국사	회거목 고사실내 조사
설악산	모노레일 설치	신흥사	관계부처 반대로 승인 안됨
계룡산	사할경내지 야영장 조성	갑사	계획 추진중
설악산	종합휴양지 조성	백담사	계획 추진중
북한산	순환도로 건설	화계사	사업검토중
내장산	관광객탐방소 건립	내장사	신속진행중
지리산	골프장 시설물 건립	침봉사	신속진행중
필약산	인야개발 산림훼손	덕주사	진입로 조성사업 등 사할과 주민 협의중

(1997년 8월 환경부 자연보전국)



◇ 해인사가 위치한 가야산 지역에 골프장 개발이 추진되지 불교계와 환경단체는 일제히 저지운동을 벌였다.